

알파(α)걸의 현 주소



이영애
단국대학교 공공관리학과 교수



한 여학생이 죽었다. 낯선 이국땅에서. 새벽
길, 청소아르바이트를 위해 집을 나선 지 채 10
분이 되지 않아 ‘그냥 아무나 닥치는 대로 죽이
고 싶었다’는 현지인의 망치에 머리를 맞아 즉
사했고, 시체는 길거리 공원에 버려졌다.

취업이 전쟁이 되어버린 지금,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른 채 젊은이들은 마냥 치열
하다. 소위 ‘스펙’에 매달려 학점과 자격증과 어
학연수라는 취업전쟁의 트라이앵글에 갇힌 그들
은 공교롭게도 내신, 수능, 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겪은 이들이다. 그들에게 1년간
취업, 관광, 어학연수를 겸할 수 있다는 워킹 홀
리데이(working holidays)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초의 기대와 달리 농장,
공장, 청소잡역부로 일하며 인력, 숙박업체에 소
개비를 뜯기다보면 주당 20만 원 이하의 보수도

온데 간데 없지만, 이를 해소연할 곳도 처지도
되지 못한다. 사전준비없이 치르는 전쟁에 패배
한 것은 그들만의 책임일까? ‘아프니까 청춘’이
기에 감내해야 하는 시련일까?

136개 국가 중 111등.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성 격차(Gender Gap Index) 순위이다.
여성에게 얼굴을 가리게 하고, 운전을 못하게
하는 나라보다도 낮은 순위다. 물론, 성 격차를
산출하는 통계기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단순히 남성의 수준에 비추어 여성의
수준이 어떤지 수치화했기 때문에 한국이 아프
리카 최빈국보다도 낮은 성 격차 순위를 갖게
되었다. 이를테면, 한국여성의 중등학교 취학률
은 95%이고, 한국남성의 중등학교 취학률은
96%인데, 아프리카 어떤 국가의 여성 37%가 학
교에 다니고, 남성이 23%만 진학했다면, 그 나

라보다 한국의 성 격차가 더 떨어지게 산출되는 방식이다. 절대수치는 감안하지 않고 상대수치만 계산해 내는 방식의 문제점이다. 통계방식의 문제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한국남성이 4만4천불을 버는 동안, 한국여성은 1만8천불을 번다.

알파(α)걸은 하버드대 심리학과 댄 킨들런 교수의 개념이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에도 뛰어나며 자신감을 가진 독립적 여성상을 일컫는 말이다. 신입생 중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었고, 각종 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하는 여성이 속출하고 있다. 교내외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장학금을 독차지하며 학생대표 연설을 도맡아하는 여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리더십 연구에도 여성적 관점이 도입되었다. 리더십 연구에 여성적 관점이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한 조직구조의 변화 둘째,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인생관의 변화 셋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이다.

첫째,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조직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조직은 산업사회에서 태동하였는데, 특히 관료적 위계질서와 생산성 제일주의가 계층적 조직을 선호하였다. 위계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은 전체적 리더를 요구하였으며, 명령과 통제를 활용하여 조직을 통솔하였다. 그러나 현대 지식정보사회의 조직은 정태적이고 정형화된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유연하고 역동적이며 한시적인 조직이 수시로 만들어지고, 또 해체되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명령과 통제의 리더보다는 배려와 설득의 리더 역할이 더 중시되고 있다.

둘째, 낮은 출산율과 늘어난 평균수명에 따라 인생관이 크게 달라졌다. 산업사회에서는 한 번

직장은 평생의 일터로 인지되어 대체로 정형화된 라이프사이클이 기대되었다. 졸업-취업-결혼-가족부양-퇴직-가족의지-사망의 순서로 60세 전후의 평균수명이 보편적 인생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결혼율과 출산율, 퇴직연령이 낮아지고, 이혼율과 재혼율, 재취업률, 평균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통계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직장의 경쟁구도는 점차 심해져 구직과 승진이 모두 어려워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조직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혼관, 가족관, 직업관을 모두 변화시켰다.

셋째, 여성 사회참여의 양과 질이 모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산업사회의 가부장적 가족이 해체되면서 여성의 취업은 결혼보다 중요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병행 가능한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성엘리트가 약진하고 있으며 리더와 구성원 간에 나이와 성별의 역전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미래사회의 여성성을 전망하는 장밋빛깔의 리본을 바라보며 여전히 힘겹게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는 젊은 여성들이 있다.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에 시달리며, 똑같이 일하고도 임금을 덜 받는 여직원들이 있다. 알파(α)보이에 밀려 번번이 낙방하는 여학생들이 수없이 많다. 한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한 알파(α)걸이 죽었다. 낯선 이국땅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던 젊은이에게 어른들이 진빛이 새삼 무겁다.

신모계사회, “각성하라! 남성들이여!!”



이정우
YTN 충청본부장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조그만 목욕탕이 있다. 동네 목욕탕보다는 작지만 열탕과 온탕, 냉탕 여기마다 사우나실도 갖추고 있어 입주민 모두가 신기해하고, 만족해한다.

처음에는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용자가 스스로 목욕탕을 관리했다. 문제는 남탕과 여탕의 관리상태다.

남탕의 경우 허구한 날 락커실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고, 목욕탕 안에는 머리카락이 쌓여 배수도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엉망이어서 모두가 인상을 쓰며 불만만 토로했다.

그러나 여탕은 달랐다. 남탕에 비해 이용자가 3배 이상 많은 데도 스스로 목욕탕을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잘해서 그런대로 욕탕을 꾸려 나갔다고 한다.

물론, 목욕탕 관리는 채 두 달이 되지 않아 관

리인 손에 넘어갔다.

여자의 우월성과 사회성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어디 하나 남자가 앞서는 곳이 없다. 남녀공학의 경우 한 반에 1등에서 10등까지를 여자가 차지하고, 입사시험에서도 성적 순으로 남자를 뽑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여자들이 결혼을 한 뒤, 아이를 낳고 남편과 가정을 챙기면서 한눈(?) 팔기 시작할 때까지는 남성들에게 기회는 없다.

그러나 남성들은 결혼 이전이나 이후에도 여자들의 파워와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 사회생활에서 다소 여유를 부릴 수 있어도, 가정에서의 장악력은 여전히 여성에게 뒤지기 때문이다.

모계사회의 DNA가 다시 활성화되는 신 모계 사회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점심때 야외나 분위기 있고 소문난 맛집에는 여성세상이다.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에서 세상살이 걱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남자들은 구석진 곳을 찾아가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빠져 나오지만, 여자들은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시간 걱정없이 하루를 즐겁게(?) 보낸다.

자신들이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호사를 누리는 게 여자들이라며 뒷소리와 불평만 늘어놓는 게 남자들이다.

가정에서 아파트를 장만하거나 돈을 굴리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여자들의 판단력이 더 날카롭고, 현실적이다. 원시시대, 남자가 밖에서 들 짐승을 잡아오면 여자가 관리하고 먹을 걸 나눠주는 섬세하고 알뜰한 태초의 DNA가 남자의 허세와 경거망동을 단칼에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라.

여성들이 남성을 깎보는(?) 이유는, 지금은 힘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고서도 경제력만 있으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여성들은 뭉치면, (앞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한다. 부드러운 혀와 섬세함, 주변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직감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남성들은 서로를 질타하고 경쟁심을 앞세운다. 남자들이 서로 치고받을 때 여성들은 물리적인 충돌을 피해 저만치 앞서 가곤 한다. 남자가 힘보다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요즘, 충청인들이 목소리를 냈다. 국회의석 좀 늘려달라고... 호남보다 인구가 많아졌으니 국회의원 수를 늘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충청도 사람들의 양반적(?)인 태도와는 사뭇 달라진 움직임이다.

영남과 호남의 지역현안과 정부예산 챙기기는 유별나다. 충청도의 “냅뒤유~”와는 차별화가 된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다. 영·호남 공무원들의 ‘1박2일 코스’의 예산 따내기 작전과, 점심식사 후 ‘커피나 한잔 하자’는 충청도 공무원과는 작업(?)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산, 즉 ‘돈’은 어느 분야에서나 실력으로 통한다. 스포츠와 연구개발 등 어느 분야에서나 최대의 투자가 최고를 만들어 내는 게 현실이다.

충청도 홀대론은 우리 모두가 자초한 일이다. “나만 깨끗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며 수염만 만지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 될 게 없다. ‘잘나갈 때 이끌어 주고, 밀어주고, 챙겨주는 게 양반(?)이 할 일이다.

인물이 나와야 한다. 세상을 바꿔 놓을 인재를 키워야 한다.

인재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인물을 키우지 못하는 충청도의 현실.

인재양성에는 여·야가, 도-농이 따로 없다.

사람을 키우면 지역과 사회, 국가와 세상이 발전한다.

물 자치권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물이란 자원은 기본적으로 이용·관리과정에서 지역적 특성이 강조되며 지역민의 경제활동 및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지닐 수밖에 없다. 국가 중심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지역민의 구체적인 이해보다 국가 중심의 물 자원 관리가 지속되어 오면서 다양한 갈등이 제기된다.

충청남도 지역에서도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의 의견과 무관하게 금강의 중·하류에 대규모 보를 설치하고, 보의 물을 보령호(수자원 공사 관리), 예당저수지(농어촌공사 관리)로 이송시키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수리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대단위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천수만 방조제와 금강하구둑의 해수 유통을 위한 방조제 구조 개편 논란, 중앙 정부 차원의 상수도 통합 추진에 따른 지방상수도 사업의 위축 논란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물의 이용과 배분이 대부분 중앙정부(국가)의 위임사무 중심이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제한적으로 권리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가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다양한 지역단위 발전 계획이 적극 추진되면서 물 자치권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물 자치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적 개선만이 아니라 선결되어야 하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물의 이용·관리특성상 지방자치단체가 물의 이용과 배분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전문 인력과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구성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하천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가 어떤 것 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설정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전문인력의 충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하천관리, 물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유입되는 하천수사용료 부과 또는 취수부과금제도의 도입 등 전면적 제도개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하천 이용·관리, 방조제 설치 및 이용·관리 등을 통해 형성된 다양한 토지이용과 같은 기존의 경제행위가 하천관리 체계 및 방조제 구조 개편 추진시 새로운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들의 경제적 손실을 해소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 자치권 실현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보다 더 심각한 지역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내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심각해질 경우 물 자치권 논의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기존의 물 개발 및 이용으로 인해 형성된 토지이용질서에 대한 철저한 기초조사와 물자치권 실현 관련 새로운 사업 추진에 따른 새로운 갈등요소 파악 및 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하구둑 구조 개편, 해수 유통 등의 경우 기존의 담수 확보를 전제로 한 토지이용 및 산업체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대체적인 담수 확보 방안 등이 제시되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 물관리조직(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물 이용자 등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위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물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부처간의 장벽을 넘어서는 합리적 물관리거버넌스의 구축이 요구된다.

물자치권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역할 분담체계 재편만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주요 관련 공기업의 역할 재편 등이 필요하다.

끝으로 농업용수의 이용은 전통적으로 특정 지역 단위의 농업인들이 공동의 노동과 비용 부담이라는 자치적 조직을 통해 하천에 보를 설치하거나 농지의 상류부에 저수지를 축조하여 물 이용·관리의 자치권을 실천해왔다.

이러한 자치적 수리 관행을 공기업인 농어촌공사 관리라는 국가 관리의 틀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농업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재해대응 능력의 제고 등의 효과도 있지만, 국가 부담의 증대와 고비용 구조가 논란이다.

농업인의 참여를 통한 자치권 실현은 농업인의 비용 부담 원칙 정립을 통한 전체 물관리의 효율성 담보 및 농업인의 안정적 수리권 확보 차원에서 제기될 필요가 있다.